<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 부정부패와 사욕으로 찌든…"

한보사태의 파장이 현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상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집권당의 목을 죄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부패의 사슬을 끊는 근원의 뿌리뽑기」가 아닌 「정치권 공멸을 통한 살아남기」를 시도하고 있어 「공동파멸」의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수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야나 관료들의 직급을 가릴 것 없이 부정부패와 연류된 자들은 모조리 법의 존엄을 되새기는 준엄한 심판대에 올려 놓아야 하고, 「한보」에 연류된 은행장이나 은행의 임직원들도 부정대출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동태를 지켜보면 「진범」을 추적해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는 단호함보다는 정치권과 야합한 물타기 수사를 자행함으로써 「범죄의 경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를 싸잡아 「부패의 정도」를 동일시함으로써 「폭로」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고위관료 몇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전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사법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사정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일반은 국민의 편에서 법을 입안하는 입법의원, 직무에 충실한 올바른 관료와 행정부, 「법의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검찰,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의에 반하는 부정의」를 심판하는 판사와 사법부의 존재를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현실여건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60~70년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80~90년대에 들어서도 모든 국사가 「5적」들의 손에서 그들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양심있는 당사자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양반사회의 잔존물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관련법과 안기부법 처리과정, 그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가 공권력이 고유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 국민들은 그러한 사태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음은 물론, 그로인해 벌어지는 「무정부적 현상」 조차도 막을 수 없다는 「민주화」된 국민의식을 잊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일반은 법의 내용 못지않게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독선과 국가경제를 정치의 볼모로 생각하는 몰염치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을 더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일반의 의식구조가 그러한 입법, 행정, 사법부의 「무도덕 및 몰염치」와 비교해 어느정도 깨어 있으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을 제기해야 할 정도이고 또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나, 국가공권력을 입안하고 행사하며 판단하는 그들과 단순히 비교할 대상은 아닐 것이다.
다만, 오늘에 와서 우리가, 아니 나 자신이 판단하고 자성해야 하는 것은 왜 스스로가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는 과대평가하면서 과도한 욕심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지를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족」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인가, 아니면 스스로만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인가? 이웃집 땅사면 배가 아프고, 내 자식은 누구보다도 잘나야 되며, 스스로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나머지 스스로의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지나치리만큼 매몰차고 탓하기를 좋아하는 「한민족」의 의식구조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19세기 말엽 기독교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 100여년만에 1500년 전통의 불교를 제끼고 국교(?)의 위치에 올라섰건만, 오늘도 우리의 「사생아」들은 이국땅 코쟁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하는게 「한민족」이 아니던가! 그 무책임은 과연 누구의 탓인가?
한미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는 위컴은 한민족을 가리켜 「들쥐근성」을 지닌 국민으로 비아냥거렸고, 미국의 모주간지는 모여대생들의 하교장면을 표지로 「사생활의 문란과 매춘」을 대서특필하지 않았던가! 물론 형식적인 사과표명이 있었지만, 사실과 동떨어진 「무근」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운 사실이 아니던가!

우리, 아니 나 스스로가 자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최후의 시점」이 아닐런지…

<화학저널 1997/2/17>